

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XXX

“경제위기 재도래할 것인가?”

아시아에서 IMF체제를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벗어났다던 한국경제가 최근들어 급격히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경제산업 구조조정이 금융 및 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밀려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벤처기업들의 몰사가 머지 않았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는 한계기업들의 연쇄부도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기업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고, 부도를 우려한 금융기관의 몸사리기로 금융시장에서는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금리 정책으로 안정세를 보여온 물가가 다시 들먹이고 있고, 수출부진으로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주변여건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급락 가능성과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확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 가능성과 실물경제의 위축 등이 경기하강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한국기업들이 외형상으로는 부채비율을 낮췄지만 부채를 갚아서 줄인 것이 아니라 계열사 유상증자 등을 통한 눈속임식 부채감축에 몰두했고, 정부도 이를 뻔히 알면서도 눈감아주는데 급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합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부채비율 225%는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 높은 수준이고,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산을 매각해야 할 판이다.

모건 스탠리는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50조원의 자산을 매각해야 하며, 계열사간 유상증자까지 고려하면 GDP의 30%에 이르는 150조원의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하지 않는가? 특히,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한국기업의 불성실한 구조조정을 지적하며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려면 △저금리정책 지속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등 거시경제의 안정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신뢰도 제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동시추진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구축 등을 꼽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우리 모두가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버리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 및 기업부실 막기에 수십조원을 투입하고, 근로자들 달래기 위해 명예퇴직금 지급을 막지 않음은 물론 실업수당 지급에 공공근로까지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더니, 이제는 재벌을 견제한답시고 벤처기업 육성에까지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구조조정을 앞당기기보다는 사회 전체를 모럴 헤저드 상태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재벌들의 계열사 유상증자 농간으로 부채감축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고, 벤처를 육성한답시고 재정지출에 국민일반의 호주머니 돈까지 끌어모아 임금은 하늘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기득권층의 표심을 우려해 세제를 손대지 않음으로써 소득이 모두 소비로 연결되는 판이다. 여기에 국제 원유가격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1999년말 현재 중앙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진 부채가 90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8.6% 수준에 달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36조8000억원(GDP의 8.8%)의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18조원과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빚 81조8000억원을 합하면 국가부채 총액은 189조9000억원으로 GDP의 39.2%에 달하고 있는데도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벤처기업들이 국민일반의 쌈지 돈을 꿀꺽 삼킨 채 무더기로 도산하고, 한계기업들이 수없이 부도를 내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회정의는 막을 내릴 것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비아냥받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사회적 일탈이 표면화하는 것이다. 바로 10월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이유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가능하지도 않고 경쟁력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하는 시점이다.

<화학저널 2000/8/28>